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제1장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운 및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선원 수급요인의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선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적정 선원양성 규모
- 선원 양성기관 정비방향
- 우수 선원인력 확보전략
- 외국인 선원 고용허용 수준

□ 이하 언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론에 대신하고자 함

1) 적정 선원 양성 규모

□ 향후 중장기 선원수급을 종합해 보면 해기사는 2005년도까지 공급과잉을 나타내다가 지속적인 이직가속화 현상으로 2006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11년에 약 1,000명의 해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예상되는 해기사 공급부족은 총 3,4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초급해기사의 이직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선원복지정책과 직급별 수급안정화를 위한 선원수급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부원선원은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공급과잉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소폭의 수요초과가 예상됨.

- 특히 외항상선의 부원선원은 2007년부터 부족현상을 나타내나 연안선박의 부원선원은 지속적으로 공급과잉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부원선원의 공급은 해기사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충분히 뒤따를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급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선원수급은 2006년까지 공급과잉상태를 나타내다가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되는 전체선원의 공급부족은 약 3,1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특히 해기사의 이직을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선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선원 양성기관 정비 방향

□ 해양계 교육기관은 졸업 후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도록 추진하고, 승선후에도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급학교 진학기회 확대 등 재교육 및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함

□ 전문가 설문결과 장기적으로 선원교육기관의 정원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필수국제선박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정원조정문제를 검토하고, 3군사관학교에 준하는 재정지원으로 선원교육기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함

□ 해기전승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통상적인 운항상태의 해상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제도를 운영해야 함

□ 부원선원 양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원선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보다 전문화된 부원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특수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3) 우수 선원인력 확보전략

□ 중장기적으로 해양사상을 고취하여 잠재 해기인력인 초중고생을 선원지원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내에 선원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강화함

-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기숙사 제공 그리고 승선근무자 전원에 대한 병역혜택부여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해야 함
- 장기유급휴가제도의 도입, 선원복지 관련법의 개선 등 선원복지정책의 확대로 초급해기사의 조기 이직 대신 장기승선을 유도할 수 있는 선원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함. 아울러 선원고용복지센타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선원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사들이 경감받는 법인세의 일부를 선원의 교육 및 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는 톤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함

4) 외국인 선원 고용허용 수준

- 선원양성체제 및 직급별 균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함
 - 외국인 선원고용문제는 선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및 국적선원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선원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함. 해기사보다는 가능한 부원선원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국적선대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일부 제한하도록 함. 외국인 선원고용문제는 선원수급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승선가능 대상선박, 승선규모, 근로조건, 교육문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함.
 - 향후 일정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적선에 승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및 안전차원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해기전승을 고려하여 부족선원 해소차원에서 외국인 선원고용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선원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그러나 선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선원비에 민감한 국적선사들은 저임의 외국인 선원고용을 선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임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수국적선대나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국적선원의 승선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함.

2. 정책제언

□ 선원 수급전망 매 2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실시

- BIMCO/ISF는 1990년 이후 매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선원수급을 전망함
- 선원법에 근거법을 마련하여 매2년마다 우리 선원의 수급을 연동계획으로 전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선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선원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함

□ 톤세제도 조기도입 추진

- 오늘날 선원양성은 과거 국가 주도형에서 점차 선사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소위 톤세제도임
- 따라서 선원관련부서와 해운정책부서가 협력하여 우리나라도 톤세제도의 조기도입을 추진해야 함

□ 선원 사회보험제도 개선

- 국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선원에 대해 근무환경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육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적용됨
 - 고용보험 : 어선원 일부직종과 해외취업선원 적용 배제
 - 산업재해보상제도 : 선주에게 전적으로 의존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 본인 수혜가능성이 낮음
- 사회보험이 선원에게도 육상근로자와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수행

□ 선원수급 협의기구 설치

- 정부대표, 해기면허 발급기관,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 선원단체로 구성되는 국가차원의 가칭 “선원수급협의회”를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치함
- 협의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기관이 추정한 필요 선원인력 검토
 - 필요 교육시설 추정
 - 선원모집 및 확보 대책 강구
 - 해기 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관리 방안 논의
- 선원수급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선원법에 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함

□ 해기전승 전문대학 설립

- 일본의 경우 상선고등전문학교와 상선대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장기 승선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양수산계 고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 전문대학은 2년제로 하며 졸업 후 3급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단계적 개방

- 경쟁력이 없는 벌크선 등에는 선기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을 단계적으로 개방함
-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컨테이너선 등은 국가 필수 선대로 지정하고 한국선원을 배승하되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함

